

## 다산포럼

## 참회 없는 세상, '시저는 죽어야 한다' 만들기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을(乙)의 음악과 갑(甲)의 횡포가 꼬리를 물고 보고되는 줍이다. 음의 신문과 가 생기고, 부당한 갑을 쳐벌하는 공정한 시스템의 부족을 시민정신으로 깨우쳐 나가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일상적인 음료에도 밀어내기를 당한 들들의 서러움이 배어 있다.

그런 사태를 알고 나니 더위는 와중에 음료수를 집어들 때도 특정기업 제품인지 확인해보는 습관까지 생겼다. 문제의 기업 매출 실적이 줄었다는 보도를 보며, 다른 횡포도 시민정신에 힘입어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풍토가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생각도 잠시, 이어지는 또 다른 갑들

의 횡포는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든다. 온갖 분야에서 벌어지는 갑들의 횡포와 불양식 더미 속에서 공정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니 우울과 비애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이 우울증 지표에서 세계 상위권을 달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통계에 따르면 우울증 관련 환자가 지난 4년간(2007~2011) 47만6000명에서 53만5000명으로 12.4%나 늘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우울, 사회의 우울이 깊어지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포악한 권리에게도 양심이 있나요?" "왜 우리 사회는 잘못한 강자에게 합당한 벌을 주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받을 때도 있다. 잘못하고도 평평거리며 사는 이들을 견드리지 못하는 불공정 시스템에 질려 공정한 해결을 갈망하던 차에 '시저는 죽어야 한다'를 보니, 예술을 통한 각성의 힘을 용기준다.

역전 노장 바비아니 형제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캐비비아 교도소의 공연과정을 보여준다. 파비오 카발리는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연극만들기로 정평이 난 교화작업 예술가이다.

세익스피어 원작 '율리어스 시저'를 무대

에 올리기 위한 오디션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같은 상황을 한번은 슬프게, 또 한번은 화를 내며 표현하는 오디션을 거쳐 20여명의 수감자들이 로마제국 정치가들 역을 하니 나씩 맡는다.

마야 밀매자(지오반니 아르쿠리)는 시저 역을 맡고, 조폭 범죄자(살바토레 스트리아노)는 브루투스역을 맡고, 살인범(코시모 레가)은 교활한 음모가 카시우스역을 맡는다. 이들은 모두 심각한 범죄로 종신형 내지 장기복역에 처해진 이들이다. 시저가 종종 암살당하는 사건을 정점으로 한 연극은 감옥 복도와 도서관, 미당을 누비며 6개월간 연습에 들어간다.

조악한 종이칼과 간단한 망토를 두른채 지역어로 연습하면서 이들은 점차 변해간다. 오래 전 로마의 권력가와 현재의 수감자라는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외우며 되풀이하는 대사에는 믿음과 배신, 음모와 살인, 진실의 가치와 고통이 깊게 배어 있다.

이들은 대사를 외우며 연기를 하다가 불현듯 과거 자신의 모습과 부딪힌다. 독자자가 된 시저를 쳐치하기로 결심하는 고뇌에 사로잡힌 브루투스역은 자신의 범죄 과정이

되살아나 고통을 겪는다. 범죄를 저지르며, 고민했던 악몽이 떠올라 더 이상 연습을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이도 있다.

범죄를 저지른 이라고 해서 모두 참회하고 반성하며,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심경의 변화가 변신작업 속에서 조금씩 드러난다.

시공을 넘어 복잡다단한 삶의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세익스피어 명대사도 훌륭하지만, 수감자들의 익숙된 심성을 끌어내는 카발리 연출가의 '자유연상기법' 또한 탐힐하다. 어떤 도덕적 설교도 인간을 바꾸지 못하지만, 예술은 인간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명제를 실감나게 한다.

소박한 교도소 무대가 초청객들의 환호 속에 막을 내리고, 배우들은 좁은 방으로 돌아간다. 교도소 생활을 그려저녁 영위하던 종형의 수감자는 토로한다. "예술을 알고 나니 이 작은 방이 감옥이 되었구나!"라고.

성찰의 울림이 강한 이 고백을 듣노라니 우리의 아픈 현실이 겹쳐진다. 뉘우치지 않는 강자들에게 '시저는 죽어야 한다' 만들기처럼 자신의 저지를 참회하는 공정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 그것이 사회의 우울을 치유하는 건강 회복책 쳐방이란 생각이 든다.

## 교통칼럼

## 내 아이를 위해 스쿨존 과속운전 참으시죠

김미선  
광주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

초등학생들의 등교시간인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무렵, 여느 때처럼 짓발을 들고 한창 등굣길 안전지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대충 눈으로 보기에도 시속 60km가 족히 넘는 속도로 한 자동차가 눈 앞의 스쿨 존과 속방지턱을 지나갔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있던 아이들도, 교통지도를 하던 어머니들도 어이없는 시선으로 문제의 차량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광경은 비단 어느 날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대다수의 초등학교 앞에서는 스쿨 존에서의 시속 30km 시행운전을 막강한 채 여느 도로처럼 과속하는 차량을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횡단보도의 녹색등이 커지는 순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들,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무수히 볼 수 있다.

실제 광주지방경찰청이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내 4곳(무등·장산·영천·광천)의 초등학교 앞 도로를 단속한 결과, 이 단속카메라에는 지난 한 해 3125건의 신호반위 및 과속 차량이 적발됐다.

지난 2월~3월까지 두 달간 모두 421대의 차량이 단속됐다고 하니, 스쿨 존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매일 지뢰밭을 건너는 심정으로

등·하교를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아침 초등학교 앞길에서 짓발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들이 있는데, 바로 녹색 어머니 회원들이다. 녹색 어머니회는 전국 4098개 초등학교 51만189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44년의 역사를 가진 교통봉사단체다.

녹색어머니회는 매일 현장에서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학부모·안전교육과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등굣길 아침 봉사를 하다 보면 회원들의 수신호를 외면하거나 혹은 위협하며 지나가시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회원들이 있다. 이해가 되면서도 때론 속이 상할 때도 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가 내 자고, 그곳에 짓발을 들고 서 있는 여성의 훗날 내 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보행자가 되었다가 운전자가 되

기도 한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내가 보행자였을 때의 아찔했던 순간과 경험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불편과 희생을 강요하기도 하고 간혹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양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스쿨 존 신호지기, 차선임수, 주행속도 준수와 보행자 우선 보호 등을 법으로 정해진 것이지 선행이 아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상식들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식이 통하는 운전을 하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의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 아이들은 현장에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해도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할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스쿨 존에 시속 30km라는 속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스쿨 존은 아이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기고

## 자치구 의회는 폐지돼야

신인용  
광주 남구의회 예결특별위원장

현행 지방자치는 5·16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만 30년만인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가, 같은 해 6월 광역 자치단체가 각각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당시 모든 국민이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기대감이 반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년 6월 4일이면 또 전국적으로 제6대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는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테세이다. 그러나 각 당의 계산법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또한, 시민단체 등 일부 지식인들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까지 정당공천제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대선 이후 여·야 모습은 지금까지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말끝마다 국 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영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을지 의문스럽다.

자치구 의회는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남구 예산을 예로 들면 올해 총예산 규모는 2152억 원(일반회계 2130억 원, 특별회계 22억 원)

이다. 일반회계 기준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시비를 제외한 세입 일반재원은 769억 원인 반면, 특정재원으로 지출용도가 확정되어 예산집행의 실익이 없는 목적재원은 1360억 원으로 세입 합계는 모두 2130억 원이다.

그런데 1년간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4389억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62억 원, 보조사업 구비부담 178억 원, 자체 필수사업비 303억 원을 합하면 모두 981억 원이다.

결국 세입 일반재원인 769억 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인 981억 원을 충당치 못하고 오히려 211억 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한다.

1년 의회 운영 소요 예산은 의원 12명과 의사사무국 직원 19명을 포함해 18억 원의 운영비가 지출된다. 지킬만한 예산도 없이 감시 비용만 낭비된다면 이런 의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고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지 않겠는가. 비단 남구의회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모든 조직은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 예로 재판 과정에서 승소 이익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를 본다. 이런 어리석은 당사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주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의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해당 지역구에 광역시 의원을 놓려 당해 시의원에게 구 의회에서 맡았던 일반 구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의 기능 등을 넘기면서 그동안 즐기차게 주장해 온 시의원 보좌 관계를 병행 신설해 업무를 보좌하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당장 이해관계를 떠나 과감한 개혁으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기초의회 선거의 무용론을 잠재우면서 실질적인 자치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본다.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7-684  
팩스 062-222-4918  
e-mail opinion@kwangju.co.kr

## 전문의 완치 판정 불구 보험가입 거절해서야

보험회사들은 처음에 보험가입을 권할 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정작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별의 별 광경과 사유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나는 약관을 들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버린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때 뿐 아니라 보험 가입 때도 까다롭고 상업적인 것만 떠진다. 즉 특정한 질병에 대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기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잖다.

잘 아는 의사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을 받아 완치된 환자의 부모로부터 "생명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종종 듣는다고 한다. 그래서

병이 현재는 완치되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그 소견을 못 믿는지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에 보험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기입 기준이 제시되어 단순 선천성 심장질환은 정규 보험료에 의한 생명보험 가입이 인정되어 왔다. 우리나라로 이어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수출할 정도의 의료 선진국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소아선천성 심장질환의 90% 이상이 완치된다고 한다.

수술과 치료를 통해 완쾌하여 차후 질병의 재발 가능성이 작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차별 없이 보험 가입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

▲유은진·광주 서구 덕흥동

## 社說

## 문화전당 운영 주체 국가기관으로 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를 법인화하기로 해 광주시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 소속인 문화전당의 운영 체계를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전당 건립·운영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제한적이고, 정부 책임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문화전당 전담인력을 뽑기 어렵고, 개관 준비를 서두르기 위해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국가기관을 신설해 문화개발원을 흡수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면 되는 일이다.

특별법으로 문화전당 운영체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변경한다는 건 쉽지 않다. 지역 문화계 인사들이 정부가 문화전당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려는 수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권을 갖기로 전권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전당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으로 출발해야 하며, 정부를 결정할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립에 걸맞게 국가기관이 맡는 게 순리다.'

## 청소년 죄책감 자살, 대책 마련 서둘러야

최근 광주에서 여고생 등부 자살 사건이 일어난 후 해당 학교 학생들이 심각한 집단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고 있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학생 수십 명이 자살한 동료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생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당 학교는 관련 교사와 모두 투입해 학생들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극도로 불안해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 치료와 교육, 의료 기관, 자치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면 충격을 받은 동료나 팬들이 따라 목숨을 버리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종종 나타나곤 한다. 주변의 자살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해 나서야 한다.

## 無等鼓

"한밤 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 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